

이슈브리프 831호
(2026. 4. 8)

틀라카해협 딜레마와 제4도련선: 지정학적 함의와 시사점

제831호

주동진 joo2868@inss.re.kr



국문초록

동남아 말라카해협은 역내 대만해협과 함께 세계 5대 해협 중 하나이다. 해협은 해상의 길목이자 급소로서 병목구간(choke-point)에 해당하며 전 세계 SLOCs(해상교통로, Sea Lines of Communications) 안정화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해협은 육지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아 해로를 통해 다른 지역의 해협과 해양안보·공급망의 측면에서 서로 긴밀하게 상호 작용한다. 문제는 해협이 지정학적 위기·갈등 속에서 실질적 충격이 아닌 위협의 신호만으로도 멈출 수 있는 점이다. 나아가 A 해협의 위기는 장기화의 경우 B 해협의 위기로 연쇄·전이된다. 여기서 말라카해협은 대만해협·남중국해 바로 옆의 인도-태평양 제1도련선(First Island-Chain) 끝자락에 존재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이르는 SLOCs에서의 필수 중계지에 해당한다. 더불어 중국에는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있어 불가결한 경유지이며, 미국에는 해상 주도권·포위망 유지에 있어 역내 거부방어(denial-defense) 전략을 위한 급소에 해당한다. 즉, 다른 해협들이 갈등에 직면하는 가운데 말라카해협에서도 미중 간 경합이 발생할 공산이 높다. 해양 진출은 실용외교를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불가결하다. 미중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역내 중견국에 일방적으로 강제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대비가 요구된다. 본 이슈브리프는 선제적 대비와 전략적 인식의 차원에서 말라카해협의 지정학적 위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도전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해양안보의 측면에서 실용적·장기적 대안을 고안·제언하는데 집중한다.

주제어 :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미중갈등, SLOCs, 도련선

최근 미중갈등에 노출된 한반도를 중심으로 기존의 대만해협 불안정과 함께 동쪽 끝의 파나마 운하와 서쪽 끝의 호르무즈해협 모두 불안정 상태에 진입했다. 이에 역내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플라카해협이 해협 간 연쇄·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다음 지정학적 발화점이 될 수 있다.¹⁾ 플라카해협 불안정은 우리의 공급망에 막대한 여파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대(對)인도-태평양 해양영역 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제1·제2도련선에만 국한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 해양안보와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지정학적 렌즈의 교체가 필요하다.

해양안보 속 플라카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딜레마

파나마 운하와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위기·충격은 해양안보·공급망의 측면에서 플라카해협 관련 의존성 상승과 직결된다. 물류의 정체는 경색구간의 발생으로 이어지며 그 공간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해상무역에 의존하는 여러 국가가 부담의 분배 차원에서 북극항로와 같은 새로운 SLOCs 개척에 관심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플라카해협이 미중갈등에 따른 역내 역학관계·회색지대 관련 지정학적 갈등 요소 등에도 취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의 진출과 미국의 봉쇄를 둘러싼 경합 국면에서 여러 마찰·갈등이 촉발되는데 이들 모두가 발화점이자 기폭제로 작동할 수 있다. 즉, 미중갈등은 기존의 역내 유관국 간 암묵적 질서·균형을 붕괴시킴으로써 플라카해협을 외교적·안보적 경쟁이 불가피한 딜레마적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플라카해협의 잠재적 파급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플라카해협은 주변의 전통적 안보 이슈에 가려져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미 원유·원자재 등 강대국 간 자원 패권 관련 필수적 경쟁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실제로, 플라카해협은 아시아·중동·유럽 간

1) 이곳은 1994년 발효된 UN 해양법 조약에 의거 국제 해협으로 지정되었으며 지금까지 그 지명과 관련해 말라카(Malacca, 영어식)와 멜라카(Melaka, 말레이어식)가 혼용·병기되고 있다. 이에 본 이슈 브리프에서는 현지어 및 현지 발음을 우선하는 국제적인 표기 원칙의 변화 추이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맞추어 말레이어인 ‘플라카’로 그 지명을 표기·통일했다.

최단통로로 △세계 교역량의 20% 이상 △동아시아 원유 수송의 약 90%가 이곳을 경유한다. 다시 말해,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앞으로 저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까지는 많은 국가가 플라카해협과 같은 요충지를 갈등 발화점의 대상에서 묵시적으로 배제해왔다. 이는 지정학적 급소인 해협이 국지적 분쟁 혹은 갈등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면 가해국이든 피해국이든 막대한 국익 손실이 발생할 정도로 그 여파가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중갈등과 같은 ‘강대국 간 Tit-for-Tat’이 작동하는 이상 기존과 같은 국가 간 암묵적 균형·안정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다.

동북아 밖 중동·인도·동남아 관련 지정학적 뇌관들과 그들 간의 연쇄반응이 미중갈등과 공급망 분절화·재편 등을 배경으로 점차 인도-태평양 속 외교·안보·경제의 영역으로 수렴되고 있다. 실제로, 플라카해협은 미중갈등과 글로벌 해운·통상의 측면에서 장차 우리나라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 △SLOCs 불안정 속 해양 영향력 확보·견지 등의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해양안보 관련 역대 발화점에 대한 선제적 인식·판단·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지정학적 딜레마에 따른 제4도련선의 가시화·실체화

플라카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딜레마가 내재적인 측면에서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해양 중계거점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존의 군사적 거점 재무장·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국면이 미중갈등 관련 역대 전략적 거점 확보 경쟁의 촉매로 작용하는 점이다. 실제로, 역대 여러 해양 거점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여러 전략적 대치선과 회색지대를 유발·확산시켜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제4도련선 가시화·실체화의 직접적 원동력이 되고 있다. 즉, 제4도련선은 △제1도련선의 연장선 △중국의 핵심 SLOCs이자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기축 △미국의 대(對)중국·대(對)중동 해상작전 공간 등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정학·지정학적으로 점차 유의미해지고 있다.

믈라카해협에서 시작되는 제4도련선 관련 주요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여기서 인도양뿐만 아니라 △제1도련선과의 연계성 △호르무즈해협 마비 △디에고가르시아섬 미군기지 △남중국해 회색지대와 믈라카해협 간 지리적 인접성 등도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가운데 캄보디아 레암항(港)과 호주 다윈항(港)이 미중 양국의 개입과 믈라카해협과의 지정학적 연관성 등으로 인해 대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림] 제1도련선과 제4도련선 사이의 믈라카해협2)3)



출처: Google 지도 발췌 및 필자 편집. (검색 일자: 2026년 3월).

- 2) 최근에는 차고스제도의 디에고가르시아섬 혹은 지부티와 같은 전통적 거점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 해역에 자리한 크리스마스섬과 같은 신규 거점도 추가·정비되고 있다. 현재 이곳은 호주 본토로부터 1550km나 떨어진 섬임에도 불구하고 구글 AI 데이터센터 건설 예정지로서 구글과 호주 국방부 간의 클라우드 이용 계약을 바탕으로 미국과 호주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특히 호주는 구체적인 사정은 비밀로 둔 채 △부지 임대 △본토와의 해저 케이블 연결 △호주 다윈과의 상호호환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인근의 믈라카해협·순다해협·톱북해협 등과 같은 주요 SLOCs를 경략하기에 좋은 위치에 자리한다. 즉, 호주의 행보와 섬의 위치는 해당 거점을 지정학적 차원에서 안보적 역할과 무관할 수 없게 만든다. 크리스마스섬이 향후 전략적 자산으로서 △정보 노드 △AUKUS 관련 최전선 감시초소 등이 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 호주-믈라카해협 간 거리의 제약 극복하기 위해 거점을 추가하는 속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3) 호르무즈해협이 근래 갈등·마비 상태임을 반영하기 위해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반면 동티모르는 최근 독립함으로써 아직 ‘힘의 공백’ 상태임을 반영하기 위해 노란색으로 표시했다.

캄보디아 레암항(港)과 호주 다윈항(港)을 둘러싼 미중 간 경합 국면

현재 중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대(對)동남아 영향력과 근해(近海) 해상 영향력의 견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동남아 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 등의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믈라카해협·남중국해 항발 해상 진출 시도’를 억제하는 봉쇄망을 견지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캄보디아 레암 군항(軍港)이 중국의 돌파구를 위한 거점으로 등장한다. 해당 항구는 2022년 6월 중국 자본을 통해 확장공사가 진행된 이후 2023년 12월부터 중국 군함이 교대로 정박해오고 있다. 이에 미국은 레암항(港) 관련 ‘중국군 전용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중국을 간접적으로 비판·견제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의 행보가 2026년 1월 ‘안보적 투명성과 기지의 개방성’을 명분으로 해당 항구에 군함을 기항시키며 직접 압박하는 단계로까지 상향되었다. 이는 갈등의 존속을 시사한다. 즉, 미중갈등이 계속되는 이상 관련 경합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호주 다윈항(港)은 역내 거점 경쟁의 대표적 시발점으로 호주·중국 간 2015년도 계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했다.⁴⁾ 특히 중국이 제1도련선 서남부의 남중국해 제압·내해화를 바탕으로 인도양·태평양에 진출하려는 과정에서 그 전략적·지정학적 함의가 재조명되었다. 애초에 호주 다윈항(港)은 △전략폭격기를 위한 미(美) 공군기지가 존재하는 △항후 확보할 핵추진잠수함의 모항(母港)으로 낙점된 거점이자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주요 군사요충지에 해당한다. 즉, 이곳에 대한 중국의 운영권 확보 시도는 미국·호주에 있어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호주·중국 간 운영권 회수 관련 논란이 2022년 5월부터 2026년 현재까지 첨예하게

4) 현재 다윈항(港)은 중국 기업 ‘란차오 그룹’이 호주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배경으로 약 4억 달러에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임차하며 사실상 영구적으로 확보한 상태다. 특히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밝혀지며 중국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호주의 우려가 고조 중이다. 또한 호주의 운영권 회수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호주의 운영권 회수를 AUKUS 관련 핵추진잠수함 양도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호주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현안은 미국·중국·호주를 대상으로 한 갈등의 촉매로 자리하며 여러 해양안보 관련 외교·안보적 현안에도 연쇄·점착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다윈항(港)을 둘러싼 경합도 조기에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두 건의 대표적 사례 모두 미중 간 ‘해양 거점 확보’ 관련 양적 경쟁의 지속성·확장성을 대변한다. 이제는 역내 해양안보 관련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도련선 관련 전략적 접근법에 대한 인식·활용이 불가결하다. 므라카해협은 제1도련선의 종결점이자 인도양을 시작으로 아라비아해·아덴만·호르무즈해협까지 이어지는 제4도련선의 인도-태평양 축 시작점에 해당한다. 즉, 므라카해협 기준 동쪽의 남중국해·회색지대 관련 긴장·갈등이 므라카해협에 전이되면 제4도련선 또한 해양안보·공급망의 측면에서 연쇄적으로 갈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제4도련선과 관련해 호르무즈해협 사태에 따른 후과를 경험 중이다. 우리의 제한된 자원·기회비용 속에서 지정학적 맥락·공간을 입체적으로 인식하고 국익을 실용적으로 확보하는 장기적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제4도련선 관련 전망과 지정학적 대응 전략

결과적으로, 므라카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경쟁은 △미국의 서반구 전략에 따른 힘의 공백 △제1도련선의 불안정성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 △해군력 관련 군비경쟁 △남중국해 관련 회색지대 전술 등이 유지되는 이상 ‘강대국 간 Tit-for-Tat’ 구조에 따라 점차 고조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므라카해협은 이러한 구조적 맥락과 더불어 △미(美) 해군력의 입김이 전통적으로 강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스리랑카·파키스탄 등을 통해 해양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양국 간 대치·경쟁이 격화하는 공간으로 점차 변모하며 △전략적 요충지로서 인도-

태평양 속 미중갈등 관련 차기 지정학적 발화점으로 비화할 공산이 높다. 플라카해협의 중요성이 역내 공급망·SLOCs 유지 등의 측면에서 갈수록 상향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플라카해협 불안정’ 가능성 관련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실천적 대응 전략 △분야별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plan)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은 중동사태 이후 발생할 ‘평화유지활동과 국제적 연대’ 국면 관련 행동계획 구축·입안이 중요하다. 즉, 우리가 △해협의 개방과 항행의 자유 △역내 SLOCs·공급망 안정화 △단계적 원해(遠海) 활동 능력 제고 △해상치안 유지 활동 △해양 위상 제고 등의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역내 지정학적 격변 가능성과 그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발생한 상황이다. 지정학적 레버리지 확보와 전략적 자율성 제고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배경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수행이 가능한 역할’을 선제적으로 도출·표명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략적 모호성에 의존한 수동적 태세는 ‘전략적 안정성’을 대가로 늦장 대응에 따른 관련 입지 축소와 함께 향후 예기치 못한 경제안보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인도양 관련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싱가포르 일대 해안지대 중심의 외교적 영향력 확충을 통한 선제적·연속적 중계거점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유관국과의 양자관계 기반 해양대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HACGAM(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 Heads of Asian Coast Guard Agencies Meeting) △한-ASEAN 이니셔티브 △IMO(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등의 여러 기존 협의체에 적용·융합해나가는 노력이 장기적 관점에서

실용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전략적 정합성은 UAE·Global-South 등과의 해상무역 확대와 함께 기존의 방산·해운·통상 관련 공급망 안정화 행보와도 자연스럽게 연계·수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는 국방력 부재의 태평양도서국 혹은 신생 독립국인 동티모르 등과 같은 ‘힘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탐색·발굴함으로써 우리의 해양 진출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제4도련선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對)ASEAN·대(對)태평양도서국 전략과도 지정학적으로 연계·상생하게 될 것이다. 결단과 선점이 중요하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